

보도시점 2025.7.14.(월) 10:00
(2025.7.14.(월) 석간)

배포 2025.7.13.(일) 14:00

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착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7월 14일(월) 수원컨벤션 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이하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근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유출된 사건은 2024년 처음으로 20%대 돌파(’21년 10.1%→ ’24년 22%)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되었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4.12.12.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24.12.18.)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정량화 또는 정성적 판단) 기준 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 미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및 처우에 미치는 관련 자료를 조사한 ‘판결 전 조사 보고서 (Presentence Report, PSR)’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에 따라 피해규모를 반영한 양형기준 제시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 위원회를 구성(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해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붙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위원 명단 1부.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활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기성	(044-202-4244)
		담당자	사무관	손래신	(044-202-424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 **공동연구반 위원 명단**

성 명	분야	주요이력
박태일	법조계(법원)	· 現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김종근	법조계(법원)	· 現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승우	법조계(검찰)	·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검사
최승재	학계	· 現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 現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임형주	법조계(변호사)	·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現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
윤지영	연구계	·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 실장